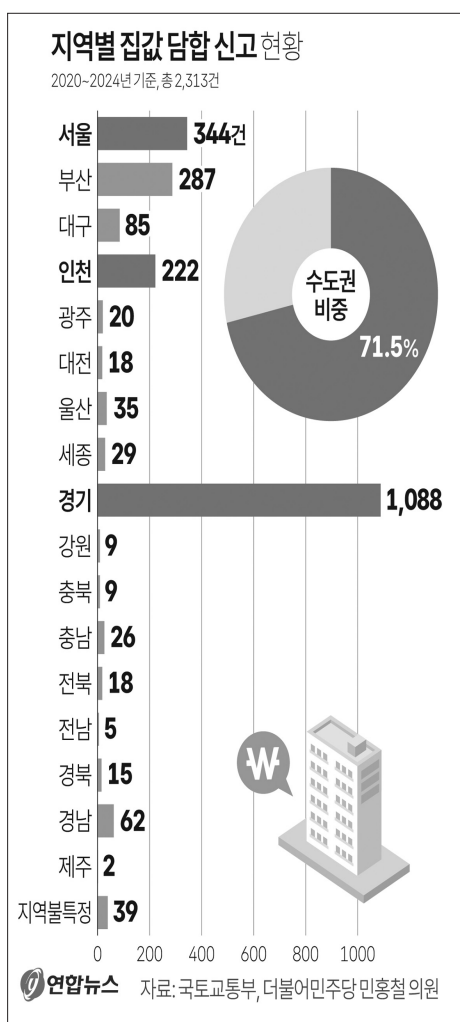


“신고해도 소용 없다”… 집값담합 조치 미흡



5년간 광주·전남 26건 신고 무혐의 처분·미조사 종결 등 처벌 강화했지만 유명무실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부동산 집값담합 신고가 20여건에 달했지만 실제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23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집값담합 처벌을 위한 범위를 넓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집값담합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 21건, 전남 5건 등 총 2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전국 총 신고 건수 2362건 대비 1% 수준이다. 하지만 적발 이후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광주는 2020년 11건, 2021년 7건,

2022년 1건, 2023년 1건, 올해 상반기 1건이 신고됐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 또는 ‘미조사 종결’ 처리됐다.

2020년과 2021년 경찰수사 각 1건, 5건만 있을 뿐이다.

전남 역시 신고 건수가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3년 1건에 그쳤다.

그동안 광주의 경우 일부 재개발·재건축 구역, 신규 택지지구에서 ‘가격 담합’ 의혹이 이따금 제기돼 왔다.

실제 2021년 북구 일대 신규 분양단지에서 입주인 카페를 중심으로 ‘이 가격 이하에는 팔지 말자’는 글이 게시돼 신고가 접수됐지만, 결과는 ‘무혐의’였다.

전남 역시 순천·여수 등 주요 도심 지역에서 유사 신고가 잇따랐지만,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신고가 집중됐다. 경기도가 1088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서울 344건, 인천 222건이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접수된 신고는 287건으로, 서울과의 격차가 불과 57건에 그쳤다. 비수도권 전체 누적 신고 659건 가

운데 무려 43.5%를 부산이 차지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418건이던 전국 신고 건수는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처리 결과를 보면 ‘무혐의 종결’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행정처분이나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건은 연평균 5건 내외에 불과했다.

이처럼 신고는 많지만 실제 처벌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증의 어려움’을 꼽는다. 부동산 담합은 대부분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대화방 등에서 이뤄지는데 행위 주체가 불특정 다수인 데다 명확한 계약 체결이 동반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 근거가 약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2023년 6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담합 신고의 적용 범위를 ‘거래질서 위반 행위’에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위반’까지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별 제재 실적은 미미하다. 특히 광주·전남

처럼 신고 대비 처벌율이 매우 저조한 지역은 제도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가 접수돼도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조사 중단’ 처리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제도가 시장 교란 억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 급등기에는 ‘집값 담합’이, 하락기에는 ‘매수세 무기’로 형태만 달리 반복되는 만큼, 국토부의 상시 점검체제와 지자체 현장 대응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한 부동산중개업 관계자는 “실제 담합 의심 게시글이 올라와도 중개사들이 ‘신고해봐야 결과 없다’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할 구청과 한 국부동산원 간 공조 시스템이 약해 현장 제보가 행정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 다”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금호타이어 쟁의행위 가결 오늘 대책위 소집 파업 우려

금호타이어에 파업 전원이 감동과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493명 중 3261명이 투표에 참여해 305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률은 93.65%.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성과급 배분, 별도 요구안 등 3개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광주공장 화재 복구, 합평 신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 현안 과제를 들고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노조가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이어 지난 10일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1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실제 파업 등 쟁의행위 실행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남 주택 노후화 심각 30년 이상 10호 중 4호

전남지역 주택 노후화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10호 중 4호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주택이었고, 광주 역시 28.9%가 노후주택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전국 노후주택관리에 관한 입법조사를 의뢰한 결과, 전남 내 주택 84만6848호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42.8%인 42만5982호에 달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며 지역 내 전체주택 10호 중 4호는 노후주택인 셈이다.

광주의 사정도 별만 다르지 않다. 광주는 전체주택 56만7994호 중 28.9%인 16만4329호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분류됐다.

전국적으로는 전체주택 1987만2674호 중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수가 557만4280호이며 시·도별 평균은 28.0%이다.

통계청은 매년 주택총조사에서 건축 이후 30년이 경과된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정의, 조사 중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

‘최우선 변제금’ 지역간 최대 2.2배 격차 서울 5500만원·지방 2500만원…“금액 현실화 시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는 ‘최우선 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서울 300만원, 지방 200만원으로 서울의 66% 수준의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원, 지방 2500만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했다.

실제 지역별 우선변제되는 보증금 현황을 보면 서울은 5500만원 이하, 수도권과 밀역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는 48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는 2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 이하다.

이 같은 지역 격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08년부터 2016년에 본격 벌어졌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원에서 2014년 3200만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 예야 1500만원으로 올랐지만 인상폭은 7%에 그쳤다.

박기왕 의원은 “서울과 지방의 최우선 변제금 보호 수준이 45%로 떨어진 상황에서 제12차 개정부터는 비수도권 보호 비율을 서울 대비 최소 2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우선변제금 금액을 현실화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규모를 대폭 상향해 전 세시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는 최근 이주 배경 가정을 초청해 ‘이해하Go! 배우Go! 드림잡Go!’ 직업체험 일일 행사를 개최했다.

산인공 전남서부지사, 이주가정 정착 지원

자녀 대상 직업체험 일일 행사…제과 실습 등 호응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는 최근 이주 배경 가정을 초청해 ‘이해하Go! 배우Go! 드림잡Go!’ 직업체험 일일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이주 배경 가정의 지속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자녀들이 직업·꿈·자격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영암 삼호지역에 거주하는 17개 가정 24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베이커리 전문가와 제과 실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진행했다. 특히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소개하는 ‘이중언어 케이크 레터링 이벤트’는 호응을 얻었다. 송대웅 기자

검색창에 **광주판촉물** · 검색 나라장터 · **S2B** 학교장터 등록업체

판촉물 / 기념품 / 굿즈

광주판촉물

www.광주판촉물.com

062.376.5431